

대전, 교통혼잡 개선 '트램-시내버스' 혼용차로 생긴다

트램이용 하다가 시내버스 환승 도로 폭 좁은곳 교통혼잡도 해소 트램건설·운전 등 개정 추진 중

대전에 트램과 함께 시내버스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혼용차로가 놓일 전망이다. 혼용차로가 생기면 트램을 이용하다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이 편해질 수 있다. 도로 폭이 좁아 발생하는 교통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7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과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이다.

우선, 대전시내에 트램인 노면전차와 시내버스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가 깔릴 예정이다.

현재, 혼용차로 운영을 위한 트램



민선8기 역점사업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시

건설,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트램 전용차로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혼용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혼용차로가 놓이면 시민들이 트램을 타다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도로 폭 협소 구간의 교통 혼잡도 해소될 수 있고, 한정

된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내년 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관련 협의 중이다. 약 1조400억원 규모의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등과 논의 중이다.

민간 투자가 필수인 상황에서 대전시는 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에 민간 기

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 부속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민자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선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은 도시철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대전시 도시철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전철) 민간 투자 사업은 수요가 많고, 사업성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전처럼 지방은 민간의 도시철도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도시철도 설치 요구가 많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성 확보 등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적은 민자 사업으로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남해군

'적극행정' 행안부 모범 사례 선정

남해군이 추진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마을자치규약 표준'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지난 1월 관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관내 마을 및 단체에서 운용중인 일부 규약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해 온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

남도음식명인 4명 추가 선정

전남도는 남도음식 보존과 계승·발전을 주도할 남도음식명인 4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도음식명인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2017년 이후 명인 추가 선정이 없던 상황에서 남도음식명인과 음식경연대회 수상자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 선정했다.

남도음식명인 자격 요건은 5년 이상 전남 거주자 중 남도음식경연대회 5회 이상 참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시·경영 분야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도민이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버스타고 '나주' 한바퀴 시티투어 4년 만에 재개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등 운영 문화해설사 동반 주요관광명소 탐방

매주 주말 버스 타고 나주시 대표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티 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나주시티 투어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나주시티투어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주의 주요 역사문화, 생태경관 명소를 하루 동안 여행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매주 토요일 역사문화체험 중심의 정기코스와 둘째 주 일요일 '힐링코스', 넷째 주 일요일 '포토스팟 코스'로 테마별 여행 노선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 5분까지로 모든 코스가 동일하다.



나주시티투어, 반남고분군. /나주시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전체 코스 출발점을 기존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KTX나주역으로 변경했다.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는 KTX나주역에서 출발해 '국립나주박물관-나주읍성-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복암리고분전시관-KTX나주역' 순으로 운행한다.

/나주(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경북, 직업계고 '외국인 입학생' 받는다

내년 3월 베트남·필리핀 등 신입생

경북도내 직업계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외국인 입학생을 받는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라공고(경주) 베트남 학생 12명 ▲의성유니텍고 필리핀 학생 8명 ▲경주정보고 베트남 학생 12명 ▲경주여자정보고 베트남 학생 8명 ▲한국해양마이스터고(포항) 인도네시아 학생 4명 ▲한국국제조리고(영주)-한국철도고(영주) 각각 몽골 학생 4명 등 7개 학교가 해외 4개국에서 모두 52명의 외국인 신입생을 맞는다.

경주여자정보고는 정원 외로, 나머

지 학교들은 정원 내 선발이다.

직업계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신입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의 정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도내 시군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집절차에 들어가 합격자가 정해지는 대로 학교별로 한국어 교육, 기숙사 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 영화도시 프랑스 칸과 업무협약

영화인력양성·상호교류 증진 합의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이자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의 도시인 부산시와 프랑스 칸이 두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프랑스 칸(Cannes)과 지난 22일(현지 시각) 영화 인력 양성 및 영화 관련 상호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도시 '부산'과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칸 영화제의 개최 도시 '칸(Cannes)' 모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두 도시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다비드리니드(David Lissard) 프랑스 칸 시장과 앞으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간 단편영화 제작 및 공적개



/부산시

발원조(ODA) 사업 공유 등 영화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랑거리, 애착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해 새로운 문화에 자극과 투자를 조래하고, 창조적 문화 활동과 혁신적 산업 활동의 연결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도시를 말한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경남, '행정통합 추진' 시·도민 여론조사

5월 말, 6월 초 총 2회 실시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양 시·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2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총 2회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1회당 2000명을 표본으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행정통합 절차의 본격 추진에 앞서 양 시·도민의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여론조사의 추진 일정 및 문항에 대해 실무추진위 개최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한 상태다.

설문 문항은 인적사항과 현안설문으로 구분되어,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반 의견 및 사유에 대해 묻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한 이후 행정통합 절차 추진 여부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산청군

'농촌'서 살아보기 운영

산청군은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나 생활환경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산청군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체험마을인 지리산 덕천강마을을 사업 운영마을로 선정해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 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리산 덕천강마을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팔기 수제비 만들기, 전통 천연염색 체험 및 짚공예 체험 등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